

석탄에 대한 사실: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위험요소 또한 존재합니다.



작성자: [Reid Whitten](#) 및 [Seth Kim](#)
(2018년 8월 9일 게시)

한국전력공사 (KEPCO) 는 북한 석탄을 지속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8 곳과 2 곳의 은행 또한 연루되어 있으며 조사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 위원장과의 만남을 국제간 긴장완화의 신호로 보았던 이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은 북한이나 미국에 의한 실질적 변화를 거의 가져오지 못했고, UN 과 미국 제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석탄인가?

2016년 초, UN 의 대북제재는 대부분 국내에서 승인되고 이행되었으며,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북한 석탄 수입을 제재 목표로 삼았습니다. 2017년 8월, UN 제재는 회원국들이 북한의 석탄, 철, 납 및 해산물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은 국내법상 UN 결의안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반 위험은 UN 및 한국 제재 규정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제재에서도 비롯됩니다.

위험요소는 무엇인가?

미국과 UN 제재는 석탄 수입 이상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미국 제재의 경우, 치외 법권의 법률 집행의 핵심은 미국 은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북한과 거래되는 많은 물자를 달러로 거래합니다.

미국 제재는 북한 정부, 조선노동당, 또는 북한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SDNs) 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미국 금융 시스템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미국 이외의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불법적으로 미국 금융 기관을 포함하거나 미국의 금융 시스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검토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 UN 제재는 거래 시 미국 달러 사용으로 인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량 현금” 의 수송을 금지합니다. [U.S. Treasury Department Publication](#) 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사기성 선적 관행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수많은 선박회사들이 차단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을 포함한 국내 기업이 북한의 지정 당과 거래할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미국 동맹국들과의 무역 및 미국 달러의 사용을 차단시키는 미국 제재의 대상이 될 것 입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직원을 포함한 국내 기업은 최대 \$1,000,000 의 벌금과 20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약 귀하의 비즈니스가 북한과 거래한 적이 있다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살펴볼 시기입니다. 미국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협력한 국내기업은 북한과 거래한 기업들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최선의 방어법은 외부 변호인 또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조사를 시행하고, 문제를 파악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완화 및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규정도 국내 기업이 내부적으로 발견한 이슈사항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부 변호인에 의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 고객 특권이 적용되어 국내 기업이 내부 문제를 제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및 내부 문제를 통제하는 방법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에 반하여, 위반한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려는 시도는 미국 집행관에 의해 악화 요인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최초의 위반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에 제재 준수 이슈사항을 다루는 기업은 은폐와 관련된 기업보다 조사 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